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

# 박근혜의

# ‘노동개혁’을

# 막아야 한다

관련 기사 3, 4, 12 면

파리 참사  
시리아 폭격은  
더 큰 비극을 낳는다

6~8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

8 면

테러방지법  
테러는 막지 못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만 침해

5 면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과  
인종차별 중단하라

9 면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3 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새정치연합

10 면

## 누구의 말일까요?

“박근혜 대통령만 올곧게 모시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

대구 동구를 총선에 도전장을 낸 전 동구청장 이재만의 출사표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만 들 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나”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고영주, 박근혜는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

“115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평등 지수, 여성대통령 시대의 현실

“만일 파리 시민들에게 총이 있었다면, 그들이 총을 갖고 다니도록 허락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박근혜는] 아주 칠푼이다.” 김영삼,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없진 않았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식용유와 실리곤을 사용했겠나.”

경찰청장 강신명,

한국 경찰차는 캠핑카인가?

다급하다고 식용유 1백여 리터가 나오게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 못됐다,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살인진압 사과 거부하는

경찰청장 강신명의 뻔뻔함

“3명 이상 모이면 파트장게 보고하라.” 이마트 목포점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

이마트판 계엄령

“캐서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관리직 직원을 호출하고, 그 직원이 오면 ‘화장실 간다’고 대면 보고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마트 노동자의 증언

“조계사에 경찰병력을 투입해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고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집기에 혈안인

새누리당 김진태

##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 독자기고 서평  
《베르골로 리스트 — 젊은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는가?》

★ 프랑스,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

## 공무원노조 탄압

#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최미선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갔지만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을 폐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지부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청이 빼앗아 간 현판을 되찾아 사무실을 원상 복구하고 이후 사무실 폐쇄 공격이 벌어지면 다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일단 철야 농성을 해제했다. 이날 마포구지부는 노조 현판을 되찾고 노조 사무실도 복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철야농성 중단 13일 만에 마포구청은 전격 사무실 폐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공격은 정부가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특히 행자부는 징계에 회부된 마포구 지부장이 이날 집회에서 발언한 것도 못마땅했을 것이다. 마포구청 측은 정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성과주의 강화, 퇴출제 공격을 위한 노조 갈등이거다.

부의 압박이 거세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의 마포구청장은 정부의 탄압 공세에 편승한 셈이다.

마포구지부는 농성 해제 때 결의한 대로, 사무실 폐쇄 직후 즉각적인 항의에 돌입했다.

노조 사무실 폐쇄 소식을 들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서부지역 공대위’ 소속 단체 활동가들은 마포구지부와 함께 즉각 구청장실 항의 방문, 현장 순회, 민원인에게 알리는 홍보전 등을 벌였다.

그 다음 날에는 공무원노조 서울시

역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대위’ 공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하게 열렸는데도 80여 명이 모여 강제 폐쇄를 강행한 마포구청장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포구청 노조 사무실 폐쇄가 박근혜의 노동 개악 추진,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 총궐기 이후 벌어지는 탄압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석 마포구지부장은 노조 사무실 폐쇄가 공무원에 성과주의 강화,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전에 노조

를 길들이고 투쟁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체 공무원의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투쟁이기에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마포구청 정문 앞에 임시 노조 사무실인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와 지역 단체들도 이 투쟁의 정당성에 공감하며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공무원노조 탄압과 지부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하고 조항

이원준 KT민주동지회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하고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더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측에 무제한의 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KT민주동지회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즉각 항의에 돌입했다. 20여 일을 넘게 각 지사별 출근 홍보전, 팻말 시위 등을 벌이고,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결국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KT민주동지회가 조직한 신속한 항의행동을 계기로 각종 언론이 ‘노조 집행부가 앞장서 정리해고를 수용하려 한다’고 보도하는 등 논란이 일자, 회사와 정윤모 집행부는 큰 부담을 느낀 듯하다.

KT민주동지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리하고 조항 도입을 막아 낸 KT민주동지회.

정한 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단체협약은 위법임을 주지시키고, 연이은 직권조인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은 정윤모 집행부가 또다시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항의행동과 법률적 압박을 통해 결국 정리하고 조항 철회라는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정윤모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정리하고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던 시도에 대해 조합원

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편,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은 총 65만 원이 정액 인상됐다(평균 1퍼센트 수준의 인상률). 전 산업 평균 협약 인상률인 5퍼센트는 물론, 공무원 임금 인상률 3.8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피죄죄한 수준이다. 조합원들은 허탈해 하며 정윤모 집행부에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들어 황창규 회장은 3분기까지 연봉으로 10억 8천만 원을 받아갔다. 지난해 받은 5억 7천만 원의 갑절이다. 이 중 성과급만 6억 5천만 원인데, 취임 후 실적이라고는 직원 8천여 명을 해고한 것밖에 없다. 이런 자가 성과급을 수억 원 챙기는 동안,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일군 KT 노동자들은 고작 1년에 65만 원 임금 인상이라니! 너무나 극명한 대조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KT 노사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의 우선적인 포장으로 활용하는 ‘청년희망펀드’에 적극 동참한다는 합의서도 발표했다. 직원들은 ‘회장이 정권 코드 맞추기를 위해 직원들을 뺄 뜯겠다는 것 아니냐’ 하고 분노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임단협 합의안은 11월 19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참관인도 없이 진행된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3년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KT 광양지사의 한 조합원이 회사 측의 선거 개입을 폭로하며 자결한 사례도 있을 만큼 부정이 많기 때문이다.

KT 사측과 정윤모 집행부가 ‘정리해고’ 조항을 단협에 넣어 구조조정 수단으로 삼으려던 시도는 일단 좌절됐지만, 이대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도입 등 노동 개악 정책이 성공적으로 관철된다면 KT 사측은 늘 그랬듯 누구보다 앞장서 개악된 정책과 어용 집행부를 활용해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따라서 KT 노동자들은 회사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이번 승리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맞서 조합원의 고용과 권익을 지켜 내는 투쟁을 더 강력하게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물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도 함께할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한다

#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경하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도 정부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2대 정부지침(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12월 중 발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궐기를 빌미로 한 탄압 강화를 노동개악 추진의 채찍으로 삼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조직 사무실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명하며 비난했고, 황당하게도 IS(이슬람국가)가 시위대에 스며들 수 있다며 두려움을 부추기려 애썼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도 그러려니와, 무엇보다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 시” 총파업을 하기로 했던 중집 결정을 별 해명도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시작됐고, 23일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안(노동시간, 통상임금)부터 입법 심사가 시작

됐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중집) 일각에서는 노동개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꽤 있는 듯하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와 불가분일 것이다.

물론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이견과 여야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 국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오늘(11월 24일)만 하더라도 국회 현안과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누리예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조금 전 결렬됐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도 기간제법과 파견법 상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정회한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악 저지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관되게 대변하리라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공공연한 친자본주의 정당에, 더구나 심각한 경제 위기 시기에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고 거의 무망한 일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해도 말이다.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여기에는 의료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열어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됐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에 ‘당론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같은 당 소관상임위 의원들도 반대하는 법안을 지도부가 ‘빅딜 야합’한 것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들을 얼마든지 여야 협상의 제물로 만들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예산안 연계 전술을 취하는 이유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새정연은 예산안의 정부 원안 통과를 방치하기 힘든 처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고, 일방 처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물론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일방 처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그것은 큰 실수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탄압을 휘두를 때도 그와 동시에 새정연과 한 국노총 지도부, 다양한 개혁주의자를 끌어들여 합의 모양새를 만드는 것에도 신경을 써 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공무원연금 삭감 때를 상기해 보라.)

### 공공연한 친자본주의 정당

이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이한 ‘노동개혁’ 법안들에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재보험법은 동의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개악안(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은 논의할 수 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상정(논의)할 수 없다는 식이다. 이런 입장은 새누리당의 일괄(패키지) 타결 입장에 반대해 개별 처리 협상을 열어 두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노동운동 진영 안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1월 14일 총궐기를 준비하면서, 총궐기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총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이 총파업 시기로 정한 “법안심사

소위 상정”이 총궐기 직후 닥쳤지만, 파업 돌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일부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너무 빨리 파업에 들어가면 초반에 동력을 소진하게 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정부지침 발표 시기가 예고되고,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장에서 관련 된 공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총파업에 돌입하기에 너무 이른 때는 결코 아니다.

게다가 경고성 하루파업이 아니라, 결국 잠정적일지라도 ‘노동개혁’ 추진을 저지하는 실질적 효과를 내는 파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어떤 시기에 하는 파업은 소모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총파업에 가장 좋은 때를 찾으려는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투쟁을 미루면, 국회 일정에 더 목을 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게 되는 한편, 조합원들을 수동화시키면서 김을 빼게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폭탄을 오래 방치해 심지가 녹록해지면 불이 잘 붙지 않는 법이다.

#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지난 11월 19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을 모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좀비기업’(한계기업)을 쉼아내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주력업종들의 수출이 급격히 줄면서, ‘수출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8퍼센트나 줄었다.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세계경제가 2008년의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경제마저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런 수출 부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1천1백조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수출을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

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저성과자들을 퇴출시키는 등 노동 개악을 통해 내수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위기가 가장 심각한 부문의 하나가 조선이다. 조선업 빅3(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올해 적자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조차 해양플랜트의 잠재 부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외에도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들도 위태경영이나 법정관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2014년 기준 세계 철강 생산량은 16억 6천5백만 톤인데, 그중 5억 3천5백만 톤이 공급 과잉 상태다.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철강 공급 과잉이 심각해지자 중국 철강업체들은 전 세계에 철강을 덤프 수출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

해 무역량이 줄어들자 해운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근근이 버텼지만, 이제는 명백히 한계에 이른 듯하다.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들에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좀비기업들이 존재한다.

### 좀비기업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기업 2만 5천4백52곳 중 한계기업(소위 좀비기업)이 3천2백95곳(15.2퍼센트)으로, 2009년의 2.4퍼센트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계기업의 74퍼센트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 번 이상 한계기업 명단에 올랐던 기업들이다. 한계기업의 한계가 만성적인 것이다.

좀비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2백대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는 0.52퍼센트에 그쳐, 선진국(4.16퍼센트)이나 OECD 회원국(3.69퍼센트) 또는 신흥국(5.06퍼센트) 모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성장이 정체하면서 이윤도 줄어들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에 6퍼센트를 넘어섰지만, 2014년에는 4.23퍼센트까지 줄어들었다.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뚜렷하게 둔화해 가는 상황인데다 한국의 주력업종이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경쟁 격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연구소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퍼센트대로 잡고 있다. 전형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고자 애쓰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은 화학부문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추진했다. 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빅딜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주채권자로 있는 중후장대형 기업들은 직접 구조조정을 하고자 한다.

물론 지배자들 사이의 이견과 암투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위기 산업의 기업이나 좀비기업들이 국토교통부·산

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에 로비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청와대·기획재정부한테 이견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공격을 수반할 것이다.

1998년 경제 위기 때도 김대중 정부는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오늘날 삼성그룹의 빅딜 과정에 벌어진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이에 맞선 저항도 이를 잘 보여 준다.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는 한화로 넘어가는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소속의 노동자 3천여 명이 일방적인 매각을 반대하고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3대 세습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위기와 기업들의 경쟁 때문에 빚어진 수익성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산업 구조조정은 고용 구조조정을 반드시 수반한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한계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악화 공격

이정원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평가 대상자의 10퍼센트에게 반드시 "최하위등급"을 매겨 6개월간 호봉 승급을 제한하려 한다. 또 이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사실상 '퇴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교육부도 교원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급을 확대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부터 성과주의 임금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금융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은 11월 25일 거의 모든 부처 차관들과 공공기관장 1백30여 명을 불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 강화

정부의 계획은 개인 성과 평가를 강화해 이를 임금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고용에까지 연결시키려 한다. 일단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갖춰지면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잘 조직돼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응이 중요하다. 9월 12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집회.

임금 중 성과급 비중을 높여 왔지만, 이참에 연공제의 근간을 바꾸려 한다.

이를 통해 근속 연수와 경력에 따라 호봉이 오르고 일정 정도 자동 승급이 되는 것을 막아 임금을 억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성과연봉제는 노동자 대다수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낸다.

특히 기본급에 해당하는 기본연봉 인상 차등이 누적되면, 다음 해 성과

평가를 잘 받아도 한번 벌어진 임금 격차를 좀처럼 따라잡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퇴직금의 격차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자들의 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아무리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어도 관리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KT가 비밀리에 퇴출 대상을 정해 두고 이들을 고의로 저평가

해 퇴출 대상으로 내몬 사실이 폭로된 것을 보면, 관리자들이 성과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성과 평가 강화는 공공서비스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와 수익 올리기에 내몰리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위기감과 불만

이 높은 것도 당연하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압박했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주의 공세 등이 중단되지 않으면 노사정위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노동조합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성과 평가로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면 노동조합의 협상권은 악화될 것이다.

### 격차 해소? 하향평준화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고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비정규직의 조건을 개선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예컨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바로 '호봉 인정'인데, 정규직에서 호봉제가 없어지면 비정규직이 이를 성취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은 생색내기 수준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건비 축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늘린 주범이다. 게다가 성과주의 강화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된다. 이미 경북·강원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중에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금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화 공격에 노동운동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잘 조직돼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에 굳건하게 맞서면서 '노동개혁'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난 집배원 노동자들

윤필연

2014년 현재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게 일한다(연간 2천1백24시간). 그런데 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를 보면 이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9백52~3천2백16시간으로, 독일 노동자들보다 최소 7개월이나 더 일한다.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은 노동자들을 각종 산업재해로 내몰기도 했다. 지난 10년간(2005~14년) 집배원 노동자 7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13년 한 해에만 19명이 사망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로와 중노동에 시달리며 교통사고, 스트레스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이 '토요일엔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 하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이 사활적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

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우체국에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소속의 집배원조합원들은 지난 몇 달간 토요 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들은 노사 야합 이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0월 3일과 11월 8일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수백 명이 모인 전국 집회도 열었다. 이 속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토요 근무 반대·우정노조 지도부 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건설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고통전가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승묵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정규 집배원 3천여 명이 감축됐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이 메웠

다. 상시집배원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수당 등에서 각종 차별을 받아 왔다." 또, 우정실무원, 재택위탁집배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 왔다.

더욱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토요 근무를 부활시킨 데 이어, 인력 구조조정도 가속화하려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의 "경영효율화"를 강조하며, 직영 우체국의 점진적인 축소와 민간 위탁 등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은 '시장 원리에 맞게 비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승묵 공동대표는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간 위탁을 확대하면,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또 공공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값싼 노동력만 추구하다 보면 제 시간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노동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

는 야합까지 한 상황에서,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 투쟁하려는 비대위의 활동은 매우 값지다.

### 노동자들의 불만을 대변하다

우체국의 민주화 활동가·조합원들은 그동안 어려운 조건에서도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2000년대 초에는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들 사이에서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들은 '집배원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했는데, 이후 이 노동자들과 일부 정규직 민주화 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해 '체신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게 된다.

특히 2013년 11월에 2주간 노동자 세 명이 연달아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체신민주노동자회는 계속되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본부'로 전환해 활동하다, 올해 토요 근무가 되살아난 것을 계기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과 대전에서 시작한 전국 순회 집회를 이

어가려고 조직하고 있다.

반갑게도 지금 비대위의 투쟁에 대한 노동자들의 호응과 지지는 적지 않다.

"비대위 건설 이후 8개 지방본부에서 비대위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비대위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그간 현장 활동을 하는 일꾼들이 있더라."

최승묵 공동대표는 우정노조를 개혁하고 민주화하자고도 말했다.

"우정노조를 바로 세우는 길도 조합원의 몫이다. 근로조건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노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현장조합원 1천 명의 발기인을 모아가며 힘차게 투쟁하자."

비대위와 운동본부의 활동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결집해,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의 전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 전문은 웹사이트([www.wspaper.org](http://www.wspaper.org))를 보시오.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꼬집어낸 쇠몽둥이

김영익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획’을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민을 명확한 근거 없이 ‘테러리스트’로 몰고, 한국에 온 시리아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매도했다.

말뿐인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해 버렸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의 위험이 높아진 것은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중동 개입 때문이다. 2000년대 서구의 경험을 보건대, 테러방지법은 결코 시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에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동 개입을 지지하고 파병까지 해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게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11월 24일 직접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는 테러 단체와 불법시위가 만나면 국민이 위협해진다는 모략과 협박까지 해댔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방지’하려는 진정한 대상이다. 바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 기성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이다. 물론 테러방지법은 주로 무슬림과 이주노동자, 좌파 단체들의 국제적 연대 활동을 겨냥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비대하고 반민주적인 권력도 강화될 게 뻔하다.

## 국정원

새누리당 의원 이병석 등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를 조정하고 세부적인 활동을 기획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된다.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돼, 국정원이 대테러 정보·수집, 대테러 조사 등 대테러 업무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고 출입국을 규제하거나, 금융거래와 통신이용 등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이 규정하는 ‘테러’의 기준이 모호하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활동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이 법으로 테러 글자만 붙이면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은 국회의 통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니, 국회의원도 아닌 평범한 국민들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무엇을 하는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은 억울한 희생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

〈표〉 정부·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법안들

| 법안                        | 주요 내용                                                       |
|---------------------------|-------------------------------------------------------------|
| 테러방지법안                    |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등 국정원에 막강한 대테러 권한 부여                            |
| 사이버테러 방지 법안               |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신설,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 혐의자’의 금융·출입국 정보 등에 접근 가능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통신사업자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 국가보안법·테러 관련 금융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                                  |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항공기·선박 등의 탑승 예약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사전에 제출                          |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 단체’로 규정되면, 그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로 악명이 높은 국정원이 이 법을 열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테러방지법에 정부·여당이 따로 발의한 관련 법안들까지 합하면, 정부는 민간인들을 무분별하게 사찰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들을 손에 쥐게 된다.

예컨대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에 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고 국정원 산하에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국정원은 이 센터를 사이버 상의 사찰을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 테러

혐의자’의 온갖 정보를 국정원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권한도 생긴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인터넷·SNS 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승객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에 줄줄이 올라와 있다.

## ‘제2의 국가보안법’

위에서 열거한 내용만 봐도, 정부·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관련 법안들이 민주적 권리를 광범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테러방지법을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물론 이주민과 이주민 단체들이 일차 타깃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 발발 후부터 이슬람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집중 사찰해 왔다. 그리고 2004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反韓)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하거나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자’ 등을 반한 인사로 규정하고 여러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한 바 있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테러방지법은 정부의 이주민 탄압을 더 광범하게 허용해 줄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국내 무슬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도 부추길 것이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제안 이유에 “빈번한 국제 교류와 다문화사회의 영향”을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꼽고 있으니 말이다. 이 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도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으로 또한 정부가 좌파들의 국제 연대 활동도 문제 삼을 수 있다. 2010년 경찰은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혐의 외국인 명단’에 근거해, 네팔노동 사무총장과 국제농민단체인 비아캄페시나 대표 등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예컨대, 테러방지법 하에서는 테러 예방을 빌미로 국정원이 서방의 중동 개입을 반대하고 중동 민중의 저항에 연대하는 국내 좌파 단체들을 감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한국

정부의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레바논 헤즈볼라,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을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해 났다.)

이밖에도 테러방지법안에는 국내 운동을 겨냥할 다른 독소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따위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테러’ 행위에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테러’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우려가 더욱 커진다. 심지어, 테러방지법안은 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 이용 시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선 철도나 국립대병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농성이나 점거를 하면 군대를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테러와의 전쟁

미국 국가는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또 다른 전쟁도 벌여 왔다. 미국 의회는 테러방지법의 원조 격인 애국법 등을 제정해 ‘영장 없는 도·감청’, ‘무기한 구금’ 등 막강한 권력을 보안기구에 부여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고 전쟁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이 보안기구의 일상적 감시를 받았다. ‘테러 혐의자’로 몰린 많은 사람들이 영장도,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장기간 구금됐다. 결국 2013년 전 CIA 직원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한다고 폭로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서방의 중동 개입을 지지하면서, 국내에서는 민주주의의 권리들을 겨냥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연이어 진행될 굵직한 선거들과 ‘4대 개혁’을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라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등을 제정해 국정원 같은 보안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테러 방지’를 핑계로 민주적 권리를 옥죄려는 데 반대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시리아에 파병할지도 모른다

파리 공격 직후 박근혜는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서방의 시리아 개입 지지를 밝혔다.

사실, 박근혜는 파리 공격 전부터 이런 입장을 공언해 왔다. 이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에 잘 드러나 있다. 거기서 박근혜는 아이시스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을 지지하면서 “국제연대의 [반아이시스] 안정화 지원 작업단에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향후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 안정화 작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한국군의 시리아] 파병 압박의 근거가 될 수 있다(주간 동아).”

게다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군 해외파견법안’도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한국군의 다국적군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상시적인 해외 파병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미국의 시리아 개입이 더 강화된다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이 ‘국군해외파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

시리아 인접국 레바논에는 이미 한국군 수백 명이 파병돼 있다(동명부

대). 레바논은 전 국토를 다 합해도 경상남도보다도 작는데, 이번 달 아이시스의 연쇄폭탄 테러로 60명 넘게 숨졌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의 시리아 개입을 지지하지 말라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이미 아이시스가 한국을 ‘집단지행’의 하나로 지목해 났다. 박근혜가 서방의 시리아 개입을 지원할수록, 평범한 한국인들은 테러위험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참사도 막지 못하고 인명 피해만 늘리는

# 시리아 폭격 중단하라

김중환

11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 등 테러 조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각국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이 보여 왔듯이, 군사 개입으로 ‘테러’를 막겠다는 발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11월 13일 파리에서 아이시스가 끔찍한 공격을 자행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오히려 아이시스를 일정한 범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는 한가한 소리가 늘어놓고 있었다. 지배자들의 무능과 오만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아이시스를 격퇴한다며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시리아 · 이라크에 8천 회가 넘는 폭격을 했지만 ‘테러’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프랑스도 파리 공격 1년여 전부터 아이시스 격퇴를 내걸고 이라크를 폭격하고 있었고, 올해 9월 시리아로 그 범위를 확대했지만 마찬가지였다. 9월 말부터 러시아가 시리아에 쏟아부은 미사일도 10월 말 이집트 상공에서 지국 여격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최근 아이시스는 뿔 속에 폭탄을 숨긴 남성이 뉴욕을 확보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인의 테러 공포를 한층 키웠다.

제국주의적 개입은 테러를 확산시킬 뿐이다. 도대체 어떤 동역자가 작용하는 것이길래 그럴까? 크게 두 단계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 · 러시아 · 프랑스 등이 개

입하면 할수록 그들의 역겨운 위선은 더욱 커진다. 가장 큰 위선은 제국주의 열강이 “인류의 가치” 운운하지만 정작 시리아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지금 이 국가들이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은 아이시스 대원과 평범한 시리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파리 공격이나 아이시스와 무관한 민간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폭격하는 것이다.

얼마 전 시리아에서 가족을 피신시킨 국내 거주 시리아인도 이렇게 현지의 불안감을 전했다. “땅에서는 아이시스가 일반인들을 괴롭히는데 (시리아)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계속 받아서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백린탄으로 만든 발화용 폭탄으로 공기 중에 흩어져 옷과 피부에 달라붙어 살을 태우는 무기까지 사용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게다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 정권은 시리아인들을 아이시스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죽였다. 그러나 각국 지배자들이 아이시스의 만행만 부각시키고 있어, 뉴스만 보면 시리아에서 벌어진 비극의 대부분은 아이시스 탓이라는 착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

2011년 시리아 혁명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시리아 세습 정권이 살해한 시리아인은 훨씬 더 많아진다. 현 시리아 독재자의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는 1982년 초 반(反)정부 세력을 토벌한다며 3주 동안 2~3만 명(가량)하루 1천 명(가량)을 학살하고 8세기경에 지어졌던 바빌론을 파괴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제국주의자들은 지극천하의 개입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시리아 정권을 지원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 강대국들도 시리아 정권을 공격하기를 꺼린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시리아인을 선발해 아이시스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시리아인은 대부분 아이시스보다 시리아 정권에 맞서 싸우고 싶어해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했다.

뒤바뀐 우선순위는 중동에서 영향력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라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얼마나 우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둘째, 이런 위선은 아이시스와 알카에다 등의 선전 논리를 고스란히 강화해 준다. 아이시스는 시리아 · 이라크에서 ‘외부 세계는 당신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고 지켜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도도하며 성장했다. 민간인 사망자를 대대적으로 유발하는 폭격은 현실을 더욱 그렇게 만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목숨을 바쳐 공격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시리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종파 간 갈등은 이런 거짓 선전을 더더욱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얼마 동안 아이시스에 납치됐다 풀려난 한 프랑스인조차 비슷한 논리로 프랑스의 시리아 폭격을 반대했다. “아이시스를 파괴하기 위해서라지만 (프랑스가 폭격하는) 라카에 갇힌 민간인 50만 명은 어쩔 것인가? 그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민간인을 극단주의자로 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않나?”

“개나다는 (10월 말) 선거에서 쥐스텔트뤼도가 총리가 된 후 공습에서 철수했다. 나는 프랑스도 공습에서 빠지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미국이 9 · 11 사건을 응징한다며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인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가 더 많아진 것도 똑같은 과정의 결과였다.

서도 그랬을 것이다.

“아이시스 세계관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무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세계관을 입증해 줄 증거를 찾아가니고, 찾으면 더욱 강해진다.

“아이시스를 파괴하기 위해서라지만 (프랑스가 폭격하는) 라카에 갇힌 민간인 50만 명은 어쩔 것인가? 그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민간인을 극단주의자로 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않나?”

“개나다는 (10월 말) 선거에서 쥐스텔트뤼도가 총리가 된 후 공습에서 철수했다. 나는 프랑스도 공습에서 빠지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미국이 9 · 11 사건을 응징한다며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인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가 더 많아진 것도 똑같은 과정의 결과였다.

## 양비론은 틀렸다

이처럼 ‘테러’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개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현재 진행되는 미국 · 러시아 · 프랑스 등의 폭격에 반대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파리 공격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표하면서도, “서방이 벌이거나 지원하는 전쟁과 그 전쟁에 대한 반발이 이번 파리 참극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노동당도 “우리는 전쟁이 일시적인 해결 말고 갈등을 종식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며 “올랑드의 무자비하게 강화하려고 하는 말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의 전조를 본다”며 프랑스의 보복 공습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의당 상상정 대표는 “무력을 앞세운 개입과 간섭으로 점철됐던 서방의 아랍 정책이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세력의 발호와 확산의 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같은 당 대변인 한창민(노무현재단 출신)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비판을 일 잘 삼가, 엇박자를 보였지만 말이다.

한편, 양비론을 경계해야 한다. 2001년 9 · 11 전후로 국제 운동이 겪은 골곡을 보면 양비론의 해악을 알 수 있다.

9 · 11이 터졌을 때에는 WTO, IMF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고 이라크인들을 독재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은 이 전쟁이 철저히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게다가 미국이 부추긴 종파 간 갈등 때문에 이라크인 1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전까지 존재감이 없던 이라크 알카에다아이시스의 전신) 등의 정치적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자신들의 선전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비록 오사마 빈라덴은 제거됐지만 그를 대신할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하며 지난 10여 년간 테러 위협은 되레 늘었다.

이처럼 폭격은 중동에서 보통 사람들을 더 많이 죽임으로 내몰 뿐이고 ‘테러’를 오히려 더 확산시키지만 할 것이다. 그리고 폭격을 결정한 지배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게 이에 대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미국

올해(2015년) 2월 한국의 반전평화 연대(준)은 이렇게 경고했다. “그렇게 발목에서부터 시작해 무릎을 거쳐 조금씩 수렁에 몸을 담그다 보면 어느 순간 미국은 또다시 ‘절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폭격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오바마는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내 지상군을 파병했고 처음에는 교전이 아니라 후방에서의 교육훈련 목적일 뿐이라고 사변했다. 그러나 이윽고 미국은 이라크에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투입해서 미군 한 명이 교전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에는 시리아에도 전투 부대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든 일은 파리 공격 전에 벌어진 일이다. 파리 공격 이후 미국은 중동에 개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지배자들은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프랑스의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자적 군사력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 유럽군사 동맹 나토(NATO)를 수십 년 동안 탈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파리 공격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 입장에서선 시리아

이라는 ‘개입’에 프랑스와의 동맹 관계라는 ‘웃돈’이 없어진 셈이 됐다.

공교롭게도 파리 공격 직전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었다. 자신이 중동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러시아가 그 빈 자리를 노리기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돈으로 군사력을 키워 온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최근 아이시스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력할 기색을 보였다. 미국이 크림반도 병합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여전히 불편한 관계인데도 말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지상군 1만 명 파병” 같은 강경 대응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축소될지 모른다는 미국 지배계급의 호전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여전히 오바마는 중동 개입을 줄이고 그 대신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시의 전쟁이 낳았고, 오바마 본인의 공습 결정이 키운 아이시스는 조금씩 조금씩 미국의 발목을 중동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여기에 파리 공격으로 제국주의간 경쟁 구도까지 강화되면서 미국 지배계급의 전략은 점차 수렁에 빠지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없더니? 10월 22일 미군은 이라크에서 공세 작전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미 전투병 1명이 사망했다.

파리 참사 일으킨

## 아이시스(SIS)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김중환

파리 공격을 자행한 무장 조직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는 수니파 저항 세력의 일부인 알카에다의 지부에서 비롯해 지난 1~2년 사이에 무섭게 성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 자체에 폭력성과 종파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아이시스 같은 잔혹한 조직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폭력성 · 종파성은 지난 25년 동안 이라크에서 전쟁과 UN(사실상 미국의 제재, 제국주의 점령 때문에 자라났다.

특히 2003년부터 이라크를 점령했던 미국이 저지른 짓을 봐야 한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은 이미 1990년대 내내 피폐해진 이라크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전기 ·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도 보장되지 않았다.

경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이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미군을 환영할 것이라는 부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점령 몇 달 만에 대중적 저항이 일어났다.

저항은 종파간 차이를 넘어 일어났다. ‘수니파 도시’ 팔루자뿐 아니라 ‘시아파 도시’ 나자프에서도 저항이 일어났다. 2004년 4월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군 제2대대는 팔루자 저항 진압에 맞서 항명하기도 했다.

진압에 맞서 항명하기도 했다. 이라크인 다섯 명 중 네 명이 동조하는 대중적 저항에 직면한 미국은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종파주의의 갈등을 부추겨 점령을 지속하려 했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경제 상황이 종파간 경향이 심해지는 물결치 토대가 됐다. 지역 토호나 종파주의적 민병대에 의지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미국이 실시한 이라크 공공부문 민영화도 여기에 한몫했다)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계급들을 한 종파로 묶기가 쉬워진 것이다.

게다가 전란으로 산업 구조가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에, 집단적 투쟁으로 계급적 연대를 고취할 수 있는 노동계급 고유의 힘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다.

역사적으로 세습 종파가 저지른 과오 때문에 이슬람주의가 점령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중요한 정치학 한계가 됐다.

2004년 11월 미군의 팔루자 학살로 대중 저항의 기세가 꺾이면서 종파간 갈등이 격화됐다. 학살 직후 치러진 선거로 끔찍하게 종파주의적인 시아파 정부가 등장했다. 그리고 선거를 보이콧한 수니파와 점령에 무감한 일부 시아파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종파간 내전의 양상을 띄게 됐다. 이 속에서 강경 수니파 무장 저항 세력인 알카에다가 성장할 정치적 공간이 열렸다.



알카에다는 미군을 상대로 작은 전과를 올리며 약간의 명성을 얻었지만, 지독한 종파성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얻기는 어려웠다. 한편 미국은 알카에다의 성장마저 종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빌미로 활용했다.

혁명

아랍 지역의 정세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변화의 첫째 중요한 계기는 미국 영향력의 쇠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정치적 · 군사적으로 실패했음이 분명해지고, 설상가상으로 2008년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에 돈을 쏟아붓기가 더 어렵게 됐다. 결국 2011년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군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같은 지역 강국의 상대적 지위가 높아졌다.

둘째 중요한 계기는 아랍 혁명이었다. 2011년 초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에서 대중 저항으로 친미 독재자 무바라크가 쫓겨나면서 아랍 전역이 혁명적 열기에 휩싸였다. 아랍 혁명은 알카에다 같은 세력의 입지를 좁히는 효과를 냈다. 대중 저항으로 아랍 지역 독재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테러만이 대안이라는 생각이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대중 저항의 결과로, 무슬림청제단 같은 ‘이슬람 개혁주의’ 세력이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개혁한다는 전략에 따라 이집트 · 튀니지 · 리비아 등지에서 정부 공직을 차지하거나 국가 기구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진정한 해결책은 아이시스를 대신할 대중 저항이 아랍에서 부흥하는 것이다. 대중 저항이 성장할 때, 사람들은 종파주의를 배격하고 종단(기독교/이슬람)과 종파(수니/시아)를 넘어 단결하자는 호소에 더 잘 귀를 기울인다. 단결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 바레인 · 시리아에서 혁명이 터져나오자 하나같이 종파주의의 반대 구호가 등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11년 아랍 혁명의 발발 배경이 된 정치 · 경제 위기가 여전히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슬람 개혁주의’의 정치적 한계를 대신할 혁명적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개입은 중동 현지 혁명적 세력의 입지를 좁히고 아이시스 같은 종파적 세력이 성장할 기회만 줄 뿐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민 천대와 차별도 마찬가지다.

한글 같은 친미 · 친서구 나라의 좌파들이 제국주의적 개입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유럽 각국에서 자행되는 난민 천대와 차별에도 반대하는 것은 아랍에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 방법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이 글은 11월 16일에 쓰여졌다.

파리 참사에 대한 말들 중 가장 멍청한 것을 꼽으라면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를 “전쟁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지 싶다. 전쟁 행위는 맞지만 이 전쟁은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보다 한참 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90~91년 걸프 전쟁 때 시작됐다.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의 역사를 최대한 짧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에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린 것이 정당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해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와 그 동조자들이 저지르든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저지르든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많은 좌파들처럼 이를 대등한 두 악의 세력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다.

아이시스는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아이시스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한 파괴와 ‘아랍의 봄’ 패배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아이시스 성장의 근본적 책임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중동 동맹국들에 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법무장관 팔코너 경은 — 그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토니 블러어 내각의 각료이기도 했다 — 11월 15일 보수적 토크쇼 ‘앤드류 마 쇼’에서 여러 차례 “아이시스 격퇴”를 언급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강력한 운동을 조직했던 전쟁저지연합(StWC)도 “아이시스 격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아이시스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시스 격퇴”는 공허한 연사다.

최근 패트릭 코번은 영국의 격주간 문예잡지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이렇게 썼다. “몇 년 전 바그다드에서 한



사진 출처: James Gordon (블리카)

끔찍한 학살과 파괴를 낳은 제국주의 전쟁이 테러의 원인이다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한 미군.

이라크 정치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의 모든 정당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문제다. 이들은 패배하기엔 너무 강하고, 승리하기엔 너무 약하다.’ 오늘날 시리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쪽의 무장세력이 일시적으로 패배해도 국의 세력의 도움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201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터키가 허약해진 반정부군(아이시스 제외)을 일으켜 세웠고, 옹호는 러시아·이란·헤즈볼라가 아사드[시리아 독재자]를 지켜 줬다.”

## 패배

요즘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열강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패배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둘 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꺼린다. 그래서 둘 다 시리아에 폭탄과 미사일만 퍼붓는 것이다. 11월 13일 파리 참사는 이런 폭격이 허사였음을 밝히 드러냈다.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은 [11월 13일 이른 저녁] 총리 관저 앞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 공격으로 [영국인이고 참수 동영상에 자주 등장해 ‘지하드 존’으로 알려진] 무하마드 엠와지를 사살한 것에 영국이 기여한 바를 떠벌렸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파리 공격이 벌어져], 이런 “정당방위 행위”로는 서방 국가 시민들을 절대 보호할 수 없음이 밝히 드러났다.

아이시스는 조직적인 약탈과 이데올로기적 열성에 기반해 만만찮은 전투 조직을 만들었다. 아이시스는 서방의 개입이 부추긴 분노와 증오를 뒤틀린 방식으로 결집시킨다.

리디아 월슨[옥스포드대 연구교수]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 생포된 아이시스 대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최근 <네이션>에 썼다. 월슨은 아이시스 대원들을 “점령이 낳은 자식”이라고 묘사하며 이렇게 썼다. “아이시스가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국경 없는 칼리프 국가’라는 아이시스의 이상향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존심에 상처받고 분개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존엄·가족·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카에다 몰락 이래) 제시한 최초의 세력이 아이시스라는 점이다.”

아랍 혁명의 부흥만이 아이시스에 맞설 만한 강력한 사회 세력을 이룰 수 있다.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고 아랍 지역의 지배계급을 타도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7면)

데이비드 캐머런이 파리 참사 1주일

전쯤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이집트 혁명을 압살한 이집트 대통령 엘 시시를 환대한 것은,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과 아랍 지역의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이 연결돼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좌파가] 올랑드처럼 파리 학살에 “무자비한 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제국주의 개입과 잔혹 행위라는 악순환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중동 지역과 제국주의 심장부 모두에서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될 것이다.

서방에 사는 우리는 “아이시스를 격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강패 짓을 끝장낼 수 있는 대중 운동을 건설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80호 / 번역 김준호

## 인종차별 반대 프랑스인들, 시위 금지령에 저항하다

### 데이브 수엘

11월 13일 파리 참사 이후 프랑스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려 하지만, 시위대는 강요된 침묵을 거부하고 있다. 몇몇은 시위 금지령에 맞서 이미 저항을 시작했다.

22일 일요일 오후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과 난민들 7백 명가량이 오래 전부터 기획됐던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들 중 다수는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에 참가했다.

그 전 주 경찰은 시위 조직자들에 시

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 형까지 살게 될 거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단체들이 시위를 강행했다.

활동가 바니나 귀디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금지됐는데도 여기 이렇게 모여 함께 행진한 것은 몹시 긍정적입니다.”

시위 금지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주말에 시위가 벌어졌다.

22일 밤,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에서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대 1만 5천 명이 전쟁 반대·인종차별 반대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시위 금지령에 맞선 최초의 시위는 22일 파리에서 벌어졌다.

19일 목요일에 의회에서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여섯 명 중 세 명이 이 시위에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 비상사태는 벌써부터 광범한 탄압을 낳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참사 후 첫 주에만 프랑스 전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수색

작업을 벌였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통금 조처를 시행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경찰은 통상적 허가 절차를 생략해 버릴 수 있게 됐다.

파리에서는 자선단체 ‘사랑의 식당’의 무료 급식소 운영이 20일까지 강제 중단되기도 했다. 21일 토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시위도 취소됐다. 이 모든 게 ‘공공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됐다.

그러나 귀디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마켓[예수 탄생을 기려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유럽 축제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정부

는 사람들에게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모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 시험대

핵심 시험대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매우 중요한 외교 행사로 여긴다.

총회 개막일인 11월 29일 일요일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계획돼 있었고, 총회가 끝나는 12월 12일 토요일에도 여러 행동을 벌일 계획이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정선영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부는 외국인과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탄압과 여론몰이 이후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이 겪는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노조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수업을 기른 이주노동자들을 검문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은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기른 사람에게 수업을 깎으라는 모욕과 협박까지 했다.

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인도네시아인 2명을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은 곳곳에서 마주치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도 고통받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언행이 이런 편견을 더욱 부추기고,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시스와 같은 열광주의 세력의 존재를 이유로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대다수 무슬림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열악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천대받는 소수자들이다.

속죄양

지난 십수 년간 정부는 노동계급과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고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속죄양 삼는 공격을 해 왔다.

2010년 경찰은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로 근무하던 지아울 하

크라는 파키스탄 남성을 ‘탈레반’ 조직원이라며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지아울 하크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고, 그해 말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도 이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아니면 말고’ 식 여론몰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글라데시 무슬림 공동체 ‘다와를 이슬람 코리아’ 탄압 사례는 정부가 벌인 대표적인 테러조직 조작 사건이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감이 높았던 2004년 국정원과 법무부는 이 단체를 ‘반한’(反韓) 활동을 하는 ‘이슬람’ 단체라며 조직원 3명을 추방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이 단체가 테러를 지원했을 수 있다며 한껏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러나 결국 이 단체의 ‘반한’ 활동이나 테러의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항의 운동이 벌어졌던 2006년 경찰은 이주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던 인도네시아

계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를 연행하며 ‘테러 용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경찰이 그를 ‘테러 용의자’로 지목한 근거는 그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6개월 동안이나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됐다 가 결국 인도네시아로 추방됐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 운동을 ‘반한 활동’으로 규정해 테러와 연계시켜 탄압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요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추방되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이렇게 이주노동자들과 무슬림을 테러 위협과 연결시키는 데는 사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가의 억압과 억압기구를 강화하고 싶어 한다. 이미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기사 5면) 이런 시도는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저항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11월 14일 총궐기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탄압을 주문하고 있듯, ‘테러 위협’을 부추기는 정부 공격의 칼날은 결국 노동자 투쟁을 향해 있다.

정부는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슬림 마녀사냥과 이주자 출입국 규제, 국내 이주민 통제와 차별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진정한 원인

한편 정부의 이주민 속죄양 삼기는 테러의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는 효과도 낸다. 미국과 서방 열강들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1백만 명이 훨씬 넘는 중동 사람들이 죽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다. 이 신문의 다른 글들이 입증하듯이,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동에서 벌인 잔혹한 전쟁이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다.

반전운동이 경고했듯, 이런 학살이 테러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아이시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것도 한국 정부가 파병을 하며 서방의 전쟁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무슬림 속죄양 삼기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은 정부가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를 부추기려는 이간질에 맞서야 한다. 또한 테러를 낳는 진정한 원인이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파리 공격이 벌어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주민과 무슬림을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이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은 이런 국제적인 목소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국정원은 11월 18일 테러 관련 동향 보고에서 올해 “시리아 난민 2백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면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며 시리아 난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편견을 강화하고 난민 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겼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서방의 폭격과 아이시스의 폭력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국정원의 시리아 난민 마녀사냥은 지금도 열악한 시리아 난민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에서 1994~2015년 5월 31일

까지 시리아 난민 신청자 7백13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단 3명뿐이다. 인정률이 0.42퍼센트밖에 안 된다(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인도적 체류?

심지어 최근 정부는 시리아인들에게는 개별적인 난민 지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지위로는 오로지 체류와 취업만 허용될 뿐,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매년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언제든 체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이다.

한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난민들, 특히 난민 지위를 아직 인정받지 못한 난민 신청자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18세 모로코 청년이 강제 추방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그와 함께 구금됐던 한 외국인인은 “그가 억지로 끌려가던 중 죽음을 맞이했다”고 증언해, 출입국관리소 측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올해 들어 난민 불안정 처분 건수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65건이 이뤄지던 불안정 처분이 2015년에는 월평균 2백13건으로, 3백30퍼

센트나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 인정에 극도로 인색한 것이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신속한 심사’를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는 난민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명에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지원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15년 10월 통계로 세계 11위이지만 난민 인정률은 OECD(선진국 클럽) 국가 중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었다.

그러나 프랑스 총리 마누엘 발스는 총회 기간 공공 장소에서의 모든 시위를 금지한다고 11월 19일에 못박았다.

시위 조직자들은 “[파리에서] 시위를 벌일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선언하며, 11월 29일 [국제 기후 행동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직자들은 파리에서 시위를 강행하자고 제안했다.

11월 29일에 파리 레퐁블리크 광장에서 행진하자는 직접 행동 단체 ‘반항아들’의 제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온라인에 밝혔다.

‘반항아들’ 활동가 벤아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모두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파리 참사 때문에 우리가 시위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기후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를 제기할 필요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당일 집에 머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 다른 단체들도 ‘반항아들’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12월 12일에도 시위 금지령을 우회하거나 정면돌파 할 방법들을 제안했다.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CGT)도 12월 2일 수요일을 하루 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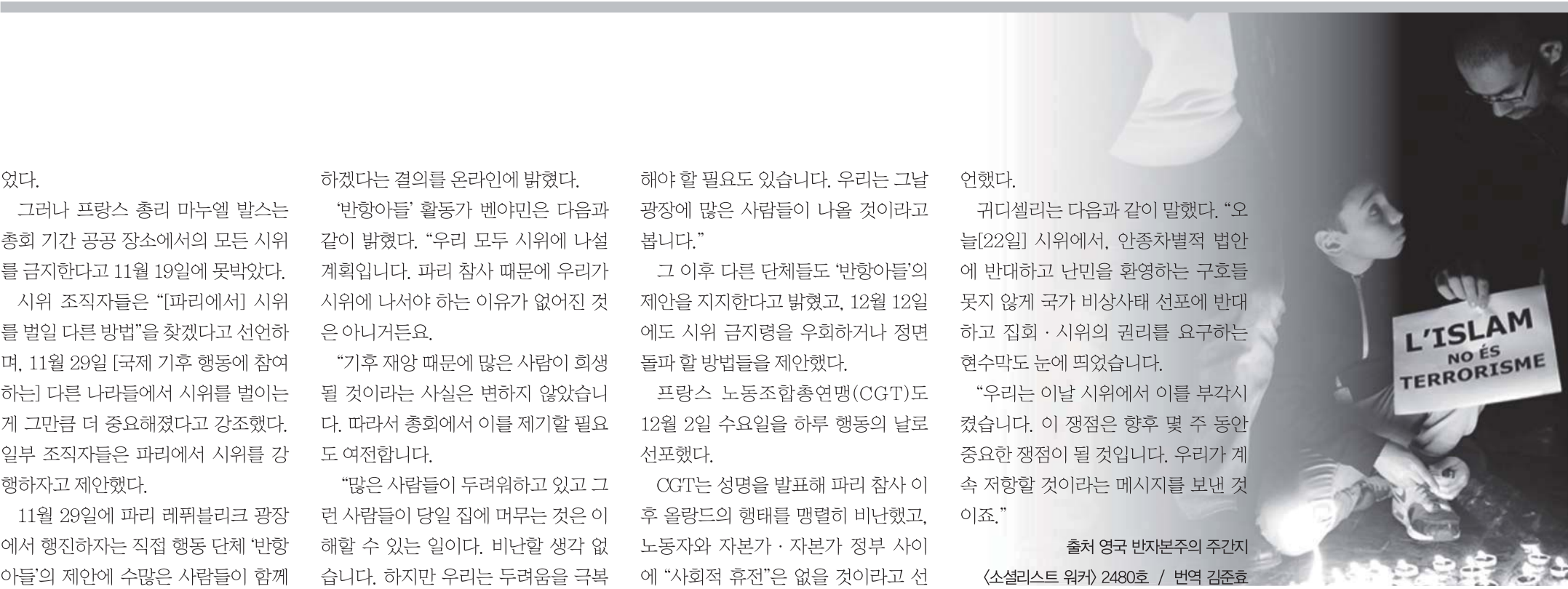
CGT는 성명을 발표해 파리 참사 이후 올랑드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고, 노동자와 자본가·자본가 정부 사이에 “사회적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

언했다.

귀디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22일] 시위에서, 안종차별적 법안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구호들 못지 않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이날 시위에서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쟁점은 향후 몇 주 동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저항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80호 / 번역 김준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장호중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됐다”면서 “서비스 산업이 핵심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자신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이 정상 선언문에 “포함”, “반영”되도록 “기여”해 놓고는 그 결과를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가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려는 법이다. 박근혜가 특히 강조한 보건의료, 교육, 물류(철도 등) 등이 핵심 대상인데 달리 말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각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방식이 아니라, 각종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꼼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10여년 전과 달리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 시행령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시행령 등으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조처가 상위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4년 상

반기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 조처에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부딪혀 일부 유보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나 대한변협 등 보수적 기관과 단체들도 위법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처럼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본가들이 안심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공서비스 관련 법의 상위법(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법’이라며 특별히 강조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듯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서 정한 ‘투자 활성화’ 조처와 충돌하는 관련법 조항들은 효력이 약해지거나 아예 개정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나중에 법적 공방이 벌어져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자본가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렛대 구실을 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가장 강경하게 지지하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집중시키는 조처도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법’으로 불려 왔다.

## 새정치연합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사실상 이 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얼마 전까지는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하면’ 논의하겠다고더니, 이제는 정부·여당의 수정안대로 ‘의료공공성 침해 및 의료 영리화 제외’라는 문구만 포함시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보건의료 규제 완화도 의료 민영화·영리화는 아니라고 잡아떼 왔다. 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영리 자회사가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대사업(필수적인 의료기기, 보장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 민영화·영리화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공공성 침해 및 의료 영리화 제외’라는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서비스산업’의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 당장은 ‘의료 관광’처럼 다소 경계가 모호한 사업의 규제부터 허물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형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메디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용하면 이는 장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된 ‘외국인 병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국내 자본이 국내 의료진을 고용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새정치연합이 법안 심의에 합의한 까닭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근본에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지만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보듯 재정 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 확

대(정부의 의료 지출 확대)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 불과 3년 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무상으로 정책에서 일찌감치 후퇴했다.

## 영리병원

새정치연합은 (비주류일지라도) 자본가들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서 의료 ‘산업’ 활성화도 근본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총선을 앞두고 궤퇴한 경제민주화법을 여당에게서 약속받는 대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 주려는 듯하다. “이미 총선 분위기”라는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전교조 등이 항의 방문을 하러 갔을 때에도 건물 출입을 막아 항의 방문단이 추운 길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뒤에야 면담에 응했다. 이 종결은 면담 자리에서도 법안 통과 저지를 약속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료민영화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아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장차 내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등 각종 자유무역 조처들은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의원 최동익이 일부 표현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안 상정 직후 열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안과 최동익안을 병합한 절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는데 법안의 “목적과 정의”가 너무 노골적이라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는 비난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 신경림조차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고 질타할 정도였다. 물론 이는 목적이 아니라 표현을 바꾸라는 주문이었다.

따라서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부문의 노동조합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등은 새정치연합에 기대지 말고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제·개정에 맞선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  
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  
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  
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  
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무 정상화는 교사들이  
가장 크게 열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  
희연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  
이었지만, 당선한 후 이렇다 할 구체적  
추진 계획도 추진 실적도 없었다. 오히  
려 불필요한 공문의 양은 지난해보다  
30퍼센트나 증가했다.

그런데 6월 4일 이후 서울시교육청  
은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시켜 왔다. 조  
희연 교육감은 “본인의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있다  
(1심은 당선무효형, 2심은 선고유예,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둔 상태).  
그동안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진영은  
정부와 우파의 공격에 맞서 조희연 교  
육감을 방어해 왔다. 교육의 진보적 변  
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깨기 위  
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우파  
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 개혁은  
대체로 불철저하거나 실패되고 있다.

게다가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내노조로 들  
어왔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단체 체  
결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  
라고 통보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직권면직을 요구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은 실망스럽게도 이  
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충남과 제주교육청은 법외노  
조 상태인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다.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선택 문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과 조희  
연 교육감의 재판은 단체교섭 체결을  
회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교  
육청 농성에 돌입했다. “단체 체결을 위  
해 노력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답변  
을 듣고 5일 만에 접거 농성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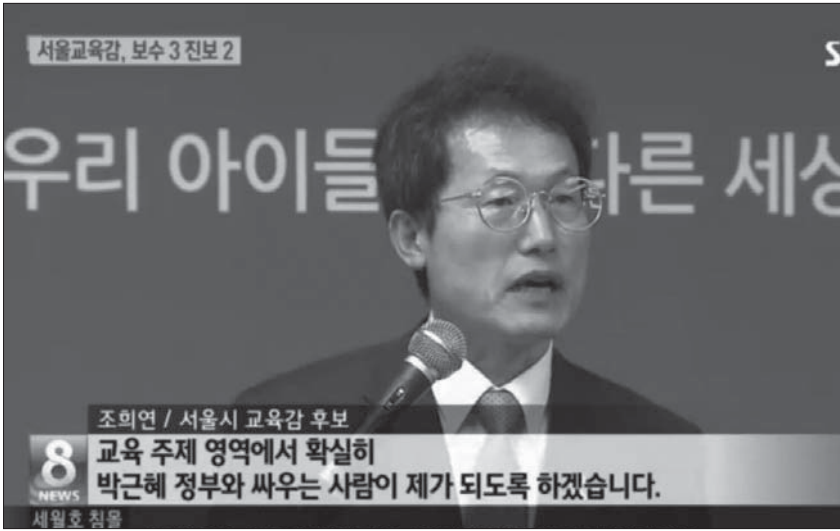
그러다 법내노조의 지위를 다시 회복  
한 것을 계기로 서울지부는 다시 조희  
연 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  
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교육청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동요하고 갈팡질팡했다. 조희연 교육  
감은 대규모 입시 비리가 불거진 영훈  
국제중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살려  
줬다. 자율형 사립학교 평가에서 합격  
점을 받지 못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유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조희연  
교육감의 제1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  
는 실패했다.

일반 학교들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섰  
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아우  
성이고, 변화를 갈망하던 교사들의 기  
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보수 세력을 의식  
해 보잘것없는 부분 개혁에 머무르거  
나 아예 개혁을 포기한다면 진보교육  
감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으로부  
터의 독립성을 견지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통 뉴스 SBS 뉴스

##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윤필언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  
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  
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  
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  
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  
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  
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부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  
향’은 정부·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  
한데다 새정치연합도 별 의지를 보이  
지 않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11월 25일 종료되는 국회 특  
위에선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보잘 것  
없는 합의안마저 무산될 듯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공적연금 강화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안 통과 후 4개  
월이 지나서야 첫 전체회의가 열렸고,  
분과 회의는 고작 열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회  
의를 무려 91차례 연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보여

줬듯이,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과 한통  
속이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국민  
연금 상향에 동의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원내대표) 이종걸은 일  
찌감치 소득대체율 50퍼센트 명문화를  
포기했다.”(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사회적기구 평가토론문)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특위가 빈손으로 끝나는 책  
임을 새누리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 당시 노동자연  
대와 공무원노조·전교조 내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사회적 기구가 공무원연금  
삭감을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공무원연  
금을 삭감한 정부가 그보다 훨씬 많은 재  
정이 필요한 국민연금을 개선할 리 만무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되고  
사회적 기구가 구성될 때에도 이 기구가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  
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하며 이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  
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 상  
황을 볼 때, 이 경고는 옳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을 주고받기 할 수 있다거나(사회  
연대전략), 사회적 기구가 공적연금 강  
화를 이를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개혁

주의 지도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현  
실적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양  
보했던 개혁 조처마저 도로 빼앗아 가  
려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OECD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다’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 낮지 않다’고 우기며 소득대체율 상  
향에 펄쩍 뛰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  
금 삭감분 20퍼센트를 사각지대 해소  
에 사용하기로 한 약속조차 뒤집으며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직  
후 33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사학연금  
을 공무원연금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  
하며 추가 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노동자  
들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는 대중 투쟁  
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서 보듯 사회적 기구  
에 대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환상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는  
효과를 냈다.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들  
은 온갖 양보론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  
익을 일관되게 방어하며 투쟁을 건설  
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5월 28일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배신적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

사진 이대진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박성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  
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  
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의 경  
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  
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  
다. 라일하 사무처장 후보를 좌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상언 선본을 지지했던  
것은 이상언 후보가 여러 쟁점들  
에서 꾸준히 좌파적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왔다는 점을 높이 샀기 때  
문이었다. 투쟁적인 지도부 당선은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활력을 고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상  
언 후보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여  
전하다.

그럼에도 2년 동안 민주노총 경  
기도본부를 함께 이끌어갈 사무처  
장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좌파 선본의 사무처장 후보는 노  
동운동을 더 투쟁적으로 이끈다는  
방향에 대해 기본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 운동을 배신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전 활동에서 투쟁 회  
피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그에 대한  
공개적 반성과 돌아보기가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라일하 후보는 이 기  
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라일하 후보는 불과 얼마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었다. 그는  
2014년 2월에 안철수 신당에 창당  
발기인으로 참가했고, 이후 안철수  
신당과 통합해 탄생한 새정치연합  
의 당원이 됐다.

### 무원칙한 타협

새정치연합은 주되게 (비주류일  
지라도) 자본가에 기반을 둔 부르  
주아 정당이다. 그래서 대자본가  
정당인 새누리당과 때때로 갈등을  
빚지만, 주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  
을 대변하면서 오락가락, 불철저  
함, 배신을 일삼고 있다. 안철수 신  
당, 새정치연합의 당원(이었던) 라  
일하 후보는 당연히 노동운동의 좌  
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노동자 운동에 등을 돌렸다고도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있는 좌파  
라면, 새정치연합 당원이 (조합원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 지도부 선

거에 출마하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

라일하 후보는 올해 공무원연금  
투쟁을 배신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  
합과 민주노총을 탈퇴한 이종재 전  
집행부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정책  
실장)이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투쟁에서 적어도 4월까지의 이종재  
가 추진한 ‘양보 교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동조  
했다. 물론 이종재의 배신적 야합과  
민주노총 탈퇴까지는 동의하지 않  
았지만 말이다.

이는 정규직·고임금·고연금 노  
동자들의 양보에 기초한 ‘사회연대  
전략’을 지지하는 견해를 반영한다.  
그는 이런 전략을 주장하고 실천하  
는 “사회연대네트워크” 소속 회원이  
자, 공무원노조의 가장 오른쪽 세력  
인 ‘혁신모임’ 회원이기도 하다.

### 노동조합 지도부 세우기

유감스럽게도 경기 노동전선과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선거 출마와  
노동조합 집행권 장악이라는 실용  
적 목적을 우선해 무원칙한 타협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당화하  
려고 라일하 후보를 ‘실무 관리형’  
의 무난한 활동가로 포장하고, 새  
정치연합 당적을 서둘러 정리하면  
된다고 봤다. 앞으로 벌어질 정치  
적 방향에 대한 이견은 ‘조율’만 하  
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도 나왔다. 특히 얼마 전까지 이종  
재의 배신에 맞서 투쟁해 온 공무  
원노조 일부 활동가들마저 안타깝  
게도 라일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  
다.

이것은 일부 좌파의 ‘노동조합 지  
도부 세우기’ 전략이 때로 얼마나 무  
원칙적이고 투사들의 바람을 저버  
릴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비  
록 사무처장 입후보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좌파라면 이  
런 타협은 하지 말아야 했다.

노동자연대의 노동조합 선거 전  
술은 현장 조합원의 자주적 활동을  
고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런  
데 정치적 궤적과 실천이 전혀 투쟁  
적이지도 않았던,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가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  
어가 부르주아 야당에 투항한 사람  
이 어떻게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노조 지도부에 당선하지 못하더  
라도 현장 조합원과 투사들에게 솔  
직하게 말하고 미래의 투쟁을 차근  
차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원칙 있는  
좌파의 태도일 것이다.



#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김문성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등의 정당한 요구가 넘쳐났다.

그러나 하반기 노동개혁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오히려 그날 냉혹하게 폭력을 휘두른 주역은 바로 경찰이었다.

경찰은 반나절짜리 집회를 막으려고 집회 며칠 전부터 계엄령 바로 아래 단계라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교통 방해로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으며, 전국에서 경찰 병력 2백 84개 중대 2만여 명을 동원했다.

그래서 정작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경찰버스 6백79대가 동원된 거대한 ‘경찰 차벽’이었다. 조준

카메라(모니터)가 달린 신형 물대포가 처음부터 차벽 위에서 시위대가 행진해 오기만 기다렸다. 경찰 차벽은 방어벽이 아니라 공격적 진압 무기였다.

참가자들을 겨냥 고압 직사로 쏘아댄 물이 이날 하루 20만 2천 리터였고, 여기에 섞은 유독물질 파바(PAVA, 물대포용 합성 캡사이신)가 6백51리터였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이 쏜 총량의 각각 24배, 3배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에 참가해 경찰 차벽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학약품 물 폭탄 수십 년치를 ‘하사’ 받은 것이다. 이도 모자라 경찰은 차벽에 오르는 걸 막는다며 경찰버스마다 식용유와 실리콘을 발라 놔는데, 그 양이 모두 2백 리터가 넘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겼음에 틀림없다. 결국 행진 초기부터 광화문과 종각 일대는 최루액의 흰 거품으로 넘쳐났고 많은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가슴 이상 가격 금지라는 경찰 규정을 경찰이 위반한 것이다.)

이 물대포를 쏜 경찰은 충남도경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누가 봐도 기절해 축 늘어진 백남기 씨의 몸 위로 계속 직사 물대포를 퍼부었다. 이 ‘살인’ 물대포는 그를 구하러 달려간 시민들의 몸통마저 정확히 겨눴다. 그중 백남기 씨를 위해 몸으로 물줄기를 막던 한 명이 결국 쓰러졌다.(새누리당은 이 참가자가 쓰러지면서 가격한 것이 백남기 씨의 중태 원인이라는 사이코패스적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날 고압 직사 ‘살인’ 물대포 발사자들은 심지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려고 온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고,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까지 무차별 조준 사격을 해댔다.

집승에게도 차마 하기 힘들 끔찍한 짓들을 경찰이 민간인 시민들에게 저지른 것이다. 이 때문에 유신 독재에 저항하며 20대를 시작한 백남기 씨는 인생의 황혼에 원통하게도 유신 독재자의 딸 때문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돼야 하고, 물대포를 현장에서 운영한 자들은 살인미수(만약 불행히도 사망시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살인 진압 정당화를 위한 사이코패스들의 발뺌

백남기 씨 부상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고도 정권이 폭력시위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고 했고, 공안검사 출신자들이 국무총리 황교안과 검찰총장 후보자 김수남은 ‘불법필벌만 외치고 있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민사상 책임’까지 운운하고 있다. 행진의 자유를 가로막힌 채 유독성 화학물질을 뒤집어쓰며 고통받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압 비용을 대라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를 연상시키는 이런 대응은 정권의 살인 진압 책임을 면피하고 우익 여론을 결집시키며, 장차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계산된 발언들일 것이다.

이미 경찰은 46개 단체 대표를 소환했고, 집회 참가자 7명을 구속했으며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 체포 전담반을 대규모로 꾸렸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아예 원천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런 권위주의적 방침은 정권 수장인 박근혜 본인이 앞장서 부추겨 온 것이다.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억지 근거로 불법시위 엄단과 (국정원의 국내 수사 권한을 대폭 늘리는)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강경 대처를 지시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특하면 정권과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에게 “훈이 비정상”, “병 걸리셨어요?” 등 천박한 언어로 우익의 적대의식을 북돋워왔다.(우익은 그래야 알아듣는다.)

11월 23일치 <동아일보>가 국정원이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적발했고 그 구성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으며 이들과 민중총궐기의 연계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한 것도 시사적이다.

이뿐 아니다. 14일 살인 진압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 강신명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수배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핑계로 삼아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최초로 침탈한 당사자였다.

이런 무모한 도발의 대가가 경찰청장으로 ‘영전’한 것이었으니, 강신명이 경찰청장 취임 후 강경 기조로 내달리고, 후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최근 민주노총을 별 망설임 없이 침탈한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치술로서 ‘인사가 만사’

라는 격언의 생생한 사례다.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은 불법 폭력 행위 증거를 찾겠다며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했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병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14일 민중총궐기의 불법 폭력성 주도 혐의를 찾겠다고 했지만, 정작 압수수색 현장에는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도 관련 대상으로 포함됐다. 경찰 폭력에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만 골라낸 것이다.

결국 경찰은 여섯 시간을 뒤진 끝에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개인물품인 손도끼 따위를 들고가 폭력 시위 용품을 찾아냈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물론 경찰 헬멧과 무전기 하나씩이 발견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폭력시위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찰 폭력에 저항한 증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자기들이 명명한 ‘불법 폭력 시위 전문 단체들’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사진: 노동자) 기자

### 민주노총 침탈

## 책임전가 모략이자 “노동개혁” 견제구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핵심 노조들을 침탈하고 협박하는 작태는 명백히 노동운동을 능멸·모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겨누는 이유는 민중총궐기 참가자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기도 했거니와, 박근혜 개악 공세의 알맹이가 “노동개혁”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통과를 위해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전하는 견제구인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때문에 박근혜의 탄압은 더 신경질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운운하는 것도 한 사례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 정부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 전가해야 한다. 물론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 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의 지지를 받을 리 없다.

결국 ‘당근’ 부족으로 박근혜 정권은 다소 무리수가 따르는 탄압(채찍)과 이데올로기적 마녀사냥(종북, 테러, 집단이기주의 등의 표상으로 대중을 서로 이간질해 희생양 삼기)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대중의 일부를 포섭해 통치의 정당성을 갖출 조건이 취약해지고 개악 공세는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 히스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박근혜의 노동개혁, 테러방지법 시도 등이 1996년 경제 위기 조정

속에서 악법 날치기를 시도한 김영삼 정부를 부분적으로 연상시키는 이유다. 김영삼은 정리해고 도입, 파견 허용 등 노동법 개악안과 87년 항쟁의 성과로 막힌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의 국내수사권을 되살리는 안기부법 개악안을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 집권당 단독으로 날치기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물론 지금의 국면이 그때처럼 노동운동의 분출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노동운동의 대응이 미지수인 이유는 조직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의 지도자들이 거듭 기회를 놓치며 실질적 파업 투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 지도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국회 처리 지연 약속에 기대를 걸며 정작 중요한 파업 투쟁을 회피했다. 일부 좌파는 파업 시기를 총궐기에 즉각 연동시키기보다 국회 상황에 연동시키면서 이 문제에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사실상 추수했다.

이런 안일한 대응 덕분에 기회를 얻은 박근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전속결에 이어 “노동개혁” 법안, “민생”으로 포장된 의료 등 민영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은 12월 5일 총궐기에 기대는 것도 늦을 수 있다. 금속노조와 제조공투본이 “강행시 끝장총파업” 식으로 투쟁을 계획한 것은 맥없이 느껴진다. 당장 실질적 파업 소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좌파들이 좌파답게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압박해야 한다.